



보도 일시	2022. 1. 18.(화) 15:10	배포 일시	2022. 1. 18.(화) 14:4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	책임자	과 장 임영진 (044-215-5720)
		담당자	사무관 이주호 (juholee14@korea.kr)

경제 · 방역 불확실성에 기민한 재정대응, 국채시장 안정에도 만전

- 스마트돌봄 · 요양업계 간담회 및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-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.18(화) 14:4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(C&V센터)에서 「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」를 주재하였음

< 제10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요 >

- ▶ 일시/장소 : 2022. 1. 18.(화) 14:40~16:40 /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(C&V센터)
- ▶ 참석자 : (정부) 기재부 제2차관, 교육부·과기부·산업부·복지부·고용부·중기부·국방부 등
(민간) KDI·조세연 등 민간위원·외부전문가 등

- 안 차관은 금번 회의에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방문, 관계부처·유관기관과 함께 스마트돌봄·요양업계 간담회*를 개최하여 산업현황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음

* 기획재정부 2차관(주재)·연금보건예산과장,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, 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등, 스마트돌봄 관계자(㈜비알프레임, 사회적협동조합 이유, (주)SKT, (주)KT),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민간위원(차상균(서울대), 박순애(서울대), 박정수(이화여대)) 등 참석

-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디지털 비대면 기술이 돌봄·요양의 공백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,
 - 향후에도 발전가능성이 높고 서비스 수요가 많은 만큼,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보건·의료·돌봄·요양 서비스 분야 접목을 가속화 시키는데 역점 투자하겠다고 언급
- 금년 예산에도 4대 분야를 핵심투자 분야로 선정하여 관련 예산을 44% 증액 반영(1,437→2,061억원)(안건 3 상술)

- ① (디지털 헬스케어 확산)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헬스케어서비스를 확산하여 환자 편의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(416→546억원, +30.8%)

- ② (병원 디지털 전환)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(124→235억원, +89.6%)
- ③ (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) 개인 맞춤형 혁신 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(334→454억원, +36.0%)
- ④ (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) D.N.A(Data, Network, AI) 기반 기술을 헬스케어에 활용하기 위한 R&D 투자 확대(563→828억원, +47.0%)

□ 금번 회의에서는 ①'22년 재정운용방향, ②'21년 국고채 시장 평가 및 향후 전망·대응, ③코로나19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재정투자방향, ④취약계층 조기취업 지원방안, ⑤'21년도 복권수익금 사용현황 및 운용 성과* 등을 집중 논의하였음

* 별도 보도자료 배포('22.1.18, 위원회 보도자료 배포 시)

2. 2022년 재정운용방향

□ 금년은 경기 회복세 확대, 민생안정·新양극화 대응, 경제구조 전환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기민한 재정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, 확장재정 효과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 집행, 안정적 국채시장 관리, 창의적인 국유재산 개발 등을 함께 추진

- 이러한 재정기조 하에 '22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재정운용전략과 추진계획을 제시

① 총 665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·공공기관 투자·민간투자를 통한 경기보강 뒷받침,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

- '22년은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 총지출(607.7조원)과 공공기관 투자(67.0조원) 및 민간투자사업(4.5조원+ α) 등 총 665.1조원*(GDP의 약 31%) 규모의 가용자원을 총동원

* 공공기관 투자(12.8조원) 및 민간투자사업(1.3조원) 국비분 중복 제거

- ① **정부 재정**은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, 新양극화 대응 등 ¹⁾민생경제의 조기회복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시정, 한국판 뉴딜·DNA+ BIG3 산업 육성 등 ²⁾선도형 경제 기반 확대를 위해 지난해(본예산 558.0조원) 대비 8.9%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 607.7조원을 투자

- 그 중 경제성장을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앙정부 투자·소비 지출*은 지난해(본예산 104.2조원) 대비 5.5% 확대된 109.9조원

* 해외이전과 민간·지자체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지출 제외

- 주요 예산 분야별로는 한국판 뉴딜 2.0, 탄소중립, 소상공인 지원 및 격차 해소를 위해 환경, 산업·중기, 보건·복지·고용 및 R&D 분야의 재정 투자를 전년 대비 최대 12% 이상 수준까지 대폭 확대

- ▶(환경) 2050 탄소중립, 대기·물·폐기물 등 생활환경 개선 등(10.6→11.9조원, +12.4%)
- ▶(산업·중기) 소상공인 손실보상, 재도약구조전환을 위한 지원(28.6→31.3조원, +9.3%)
- ▶(보건·복지·고용) 백신병상 확보 등 방역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등 안전망 확충(199.7→217.7조원 +9.0%)
- ▶(R&D) 한국판 뉴딜 2.0 기반 R&D 투자 강화 및 미래 주력산업 육성(27.4→29.8조원 +8.7%)

- ② 공공기관 투자도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¹⁾3기 신도시 조성 및 도로·철도 기간망 등 SOC 분야와 ²⁾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원년 선언 이행을 위한 신재생 등 에너지 분야 등에 중점 투자하여 지난해 (64.7조원) 대비 2.3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 67.0조원 투자할 계획

- ▶(SOC) 3기 신도시 조성 및 세종·포천 고속도로, 서해선 철도 등(36.0→37.9조원 +5.4%)
- ▶(에너지) 한국판 뉴딜 2.0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(15.9→16.1조원 +0.9%)
- ▶(복지) 공공임대,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확대(5.4→5.7조원, +6.6%)
- ▶(안전) 철도 승강장 안전시설 개량 및 감전사고 예방 등(5.2→5.7조원, +8.0%)

- ③ 민간투자사업도 '22년 투자 집행규모를 전년도 목표 3.5조원에서 4.5조원+ α(29%이상)로 확대하고, 11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

- GTX A*·B·C,** 이천-오산 고속도로 등 대도시권 광역 교통 인프라의 적기 개통을 위한 SOC 투자, 디지털·그린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화 시기에 구축된 낡은 하수도, 학교 등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과 시설 안전 투자에 중점

* 현재 공사 중인 GTX-A(건설보조금 등)는 적기개통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

** GTX-B(협상비 등), GTX-C(토지보상비 등)는 조속한 착공 지원

- 혼합형(BTO+BTL), 결합형(소규모 다수시설 복합개발), 부대사업 연계형* 등 민간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모델을 개발·적용해 신규 민간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

* 철도 역사 + 청년주택 복합 개발 등

② 정부 가용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방역 및 경제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

- 정부는 예비비, 기금여유자금, 기정예산, 초과세수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적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,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보강, 소상공인·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피해 지원, 경기보강 등에 기민하게 대응 중

- 작년 11월 12.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으며, 최근에는 기금 여유자원, 올해 확보한 예비비*를 활용해 손실보상 대상 확대, 1백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(320만 명)(‘21.12.17), 5백만원 손실보상금 선지급 등 6.5조원** 규모(소상공인지원 3대 패키지, ‘21.12.31)의 지원조치도 신속하게 시행 중

* '22년 예비비 총 3.9조원 편성(일반예비비 1.8조원 / 목적예비비 2.1조원)

**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(2.2조원) + 추가지원 4.3조원(방역지원금 3.2, 방역물품 현물지원 0.1, 손실보상 1조원)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이 지연되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지난 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총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신속히 추진

- 임대료·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3백만원씩, 약 10조원을 지원하고,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1.9조원 추가 확보(기존 3.2조원, 총 5.1조원)하는 한편, 혹 우세종이 될지 모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확실히 잡기 위한 방역지원에도 만전을 기해, “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”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

- 안도걸 차관은 금번 추진하는 추경 재원 조달에 있어 ①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 배분하고, ②전년도 이월재원 우선 활용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힘

③ 선제적 집행 관리를 통한 확장재정 효과 극대화

- 확장재정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제적 재정집행 관리에 주력하고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 점검

① 중앙재정은 상반기에 집행관리대상 200조원* 중 126조원(집행률 63%) 수준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민생안정 조기 실현을 적극 뒷받침

* 총지출에서 인건비,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 중 의무지출, 정액지급 등 집행시점·규모가 정해져 있어 집행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한 규모

-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각각 0.5%p씩 상향하여 60.5%와 64%로 설정하고 집중 관리

* (지방) 관리대상 234조원 중 141.6조원 (지방교육) 관리대상 22.2조원 중 14.2조원 집행 추진

- 특히,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총 107조원 규모(총액 기준)의 6대 핵심사업군을 선정하여 집행실적 집중 점검을 통해 집행애로 요인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·해소

< 6개 중점 집중 관리 핵심사업군 >

분 야	핵심 사업군	관리 규모
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(61.3조원)	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	18.5조원
	② 일자리 창출 및 유지	14.8조원
	③ 사회기반시설(SOC) 확충	28.0조원
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(45.7조원)	④ 한국판 뉴딜	33.1조원
	⑤ 탄소중립 재정투자	11.4조원
	⑥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	1.2조원

- 또한 102.4조원 규모의 보조사업*은 사업계획 확정 및 자금교부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고·사업자 선정 등 집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

* 민간보조사업 22.9조원(전체 예산의 3.8%), 자치단체보조 79.5조원(13.1%)

② 공공기관 투자도 67.0조원 중 상반기 내 53% 이상*(약 35.5조원 수준) 집행을 추진하고, 민자사업도 분기별 이행점검** 등을 통해 既확정된 집행규모 4.5조원 중 상반기 내 53% 이상(약 2.4조원 수준)을 집행할 계획

* 공공기관 상반기 투자집행률(%): ('20) 48.8 ('21) 52.4 ('22^{계획}) 53.0 이상

** '21년 민자사업 집행실적: 총 4.2조원, 상반기중 51.5% 집행

④ 국고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

- 국고자금의 효율적인 조달·운용과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자금조달 규모·시기를 최적화하는 등 전략적 재정운용 뒷받침
 - ① (국고자금 관리) 자금흐름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국고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,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자금배정 추진
 - (조달) 일시적인 자금부족 해소를 위해 재정증권 등을 활용하여 자금 조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, 국채시장 리스크 관리*에도 만전
 - * 시기별 국고채 균등배분, 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한 연물별 발행물량 탄력조정 등
 - (운용)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사업별 자금 수요를 반영하여 배정*하고,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사업군 집중 관리
 - * 상반기 중 60% 이상 자금배정(관리대상사업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63% 달성을 적극 지원)
 - ② (국채시장 관리) 향후 금리 인상 등 거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, 안정적 국채 발행 및 시장관리를 해나가는 한편, 코로나 이후 국채 발행량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①국채공급 체계화, ②국채 수요 확대, ③국채시장 인프라 정비, ④국채 지원체계 개편 등 4대 핵심 과제 중점 추진 계획 (안전 2 상술)

⑤ 창의적인 국유재산 개발·활용으로 경제활력 회복 지원

- 유허 국유재산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, 혁신 지원,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
 - 도심의 노후 공공건물 및 군 부대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유허 국유지를 복합개발하여 ①청년·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* ②청년 혁신 창업공간 마련** ③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복합상업시설 확보 등에 활용
 - * 16곳 2,900호 규모/22년중 2곳 준공(남양주·영등포 복합청사), 4곳 착공 예정
 - ** (1호 사업) 역삼동 KTV 재건축 (2호 사업) 부산 동남통계청 리모델링
- 국민·지역주민 등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유재산 개발을 위해 민간 참여 및 지자체 협업 확대 등 개발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도 병행

- 민간이 국유지를 최대 50년간 대부받아 개발하는 ‘국유지 장기대부 민간개발’의 시범사업*을 추진하고, 지역 내 공공청사 개발 시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SOC를 함께 도입**하는 복합개발 사업도 확대

* 송파 중앙전파관리소, 수원 舊 서울대 농대 부지 등 검토(‘22.下)

** 현재 도봉세무서(국가) + 수영장·헬스장 등 주민체육시설(서울 강북구) 개발 시범추진

【 ② '21년 국고채 시장 평가 및 향후 전망·대응 】

◇ '21년 국고채 시장은 ①한도 대비 발행량 축소, ②시중금리 대비 낮은 조달금리, ③견조한 장기물 수요 지속, ④역대 최대폭의 외국인 국고채 투자(+42.5조원), ⑤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의 5가지 성과를 시현

- 금년에도 안정적 국채발행 및 시장관리를 해나가는 한편, 코로나 이후 국채 발행 증가 등에 대응하여 4가지 핵심 과제 중점 추진

□ '21년 국고채 시장은 금리 상승 등 어려운 거시여건 속에서도 180.5조원의 국고채를 안정적으로 소화하였으며, 다음 5가지 성과를 시현함

① 연간 국고채 발행량(180.5조원)을 한도(186.3조원) 대비 △5.8조원 축소

※ 국고채 발행(조원) : (20년 실적)174.5 (21년 한도)186.3 (21년 실적)180.5(한도대비 △5.8)
(초과세수 활용 적자국채 축소(△2.5조원) + 시장조성용 발행물량 축소(△3.3조원)) ↓

② 국고채 시장 유통금리 대비 낮은 조달금리로 국고채 발행

※ 조달금리가 낮은 2년물 신규 발행 국고채 전문딜러(PD)의 국고채 인수 여력 확충 노력 등에 기인
↳ '20년→'21년 금리(평균금리, bp) : (조달금리)1.38→1.79(+41bp) (유통금리)1.39→1.89(+50bp)

③ 보험사 등의 장기물 수요 지속으로 장기물 발행 비중 탄력적으로 확대

※ '21년 연물별 발행비중^{발행목표}(%) : (단기, 2-3y)27^{30±5} (중기, 5-10y)39^{40±5} (장기, 20y이상)34^{30±5}

④ '21년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역대 최대폭인 42.5조원 유입

※ 우리경제 펀더멘털, 신용등급 대비 높은 수익률 등에 기인

↳ 外人 국고채 순투자(조원): ('18)+8.4 ('19)+12.0 ('20)+23.3 ('21)+42.5<역대 최대>
外人 국고채 보유잔액/비중(조원 % 기말): ('19)98.3/16.1 ('20)121.6/16.7 ('21)164.1/19.4<역대 최대>

⑤ 시장 변동성 확대시 적기 안정조치를 시행,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

【'21년 중 주요 시장안정조치】

시기	시장 상황	안정조치	시장반응	
3월 (3.3~15)	▶ 글로벌 금리상승 → 8일간 3Y 22bp ↑	▶ (3.15) 단일낙찰제 실시 + 비경쟁인수 한시 확대	(bp)	3.16일
			3Y	△6.1
			10Y	△5.4
5월 (5.21~31)	▶ 추경이슈 부각 → 3Y 13bp ↑, 10Y 6bp ↑	▶ (6.4) 추경시 적자국채 미발행	(bp)	6.7~9일
			3Y	△8.3
			10Y	△7.0
8월 (8.20~24)	▶ 금통위 전 변동성 확대 → 3Y 7bp ↑, 10Y 9bp ↑	▶ (8.25,31) 총 2조원 긴급바이백 시행	(bp)	8.25~31일
			3Y	△4.3
			10Y	△2.7
10월 (10.1~29)	▶ 대내외 통화긴축 → 3Y 51bp ↑, 10Y 34bp ↑	▶ (10.28) 11월 발행물량 축소 ▶ (11.5) 긴급바이백(2조 원) 시행 ▶ (11.25) 초과세수 활용 → 발행량 축소	(bp)	11.1~10일
			3Y	△22.6
			10Y	△26.6

□ 금년에도 안정적 국채발행 및 시장관리를 해나가는 한편, 코로나 이후 국채 발행량 증가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4대 핵심 과제 중점 추진

- ❶ (국채 공급 체계화)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응, 거시·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연물별 최적 발행 포트폴리오를 체계적·분석적으로 제시하는 「국채 최적 발행모형」 구축·활용
- ❷ (국채 수요 기반확대) 개인의 국고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국채법 개정안^(국회계류중) 통과 추진
 - 인플레이션 상승시 안정적 투자수단인 물가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강구
- ❸ (국채시장 인프라 정비) 국채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초장기 선물(30년)을 신규 도입
 - ①국채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, ②발행 시뮬레이션 및 ③조기경보시스템 기능 등을 탑재한 국채관리시스템 금년 중 구축 추진
- ❹ (국채 지원체계 개편) 앞으로 국채발행한도 승인기준 전환(총액기준→순증 기준)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^(국회계류중) 통과 추진 및 KDI·자본연 등 전문연구기관과 시장참여자 등을 주축으로 한 「국채연구자문단」의 체계화 등 전문성 강화

【 ③ 코로나19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예산 】

◇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추진

⇒ ①디지털 헬스케어 확산, ②병원 디지털 전환, ③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, ④디지털 헬스케어 R&D 4대 방향 재정투자(1,437→2,061억원, +43.4%)

□ (투자 필요성) 디지털 헬스케어는 ①신성장 동력 창출, ②국민의료비 절감, ③비대면 대응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투자분야로 부상

① (신성장 동력 창출) 방대한 데이터 보유(병원, 전국민 건강보험), 뛰어난 ICT 역량 등으로 연평균 16%씩 성장*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

* (Markets and Markets)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'24년 3,920억달러로 증가('17~'24년간 연평균 15.5% 증가)할 것으로 전망

② (국민의료비 절감) 고령자,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측·예방 의료를 활성화 하여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지연·방지 → 의료비 절감 기대

③ (비대면사회 선제적 대응) 코로나19로 인해 ICT를 활용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며,

- '20년 12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 '심각' 단계인 경우 의료인-환자 간 비대면 진료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

* '20.2월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이후 약 352만 건의 비대면 진료 실시

□ (중점투자 방향) ①디지털 헬스케어 확산, ②병원 디지털 전환, ③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, ④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 등 4대 분야 투자 대폭 확대 (1,437→2,061억원, +43.4%)

① (디지털 헬스케어 확산) I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·디지털 기반 헬스케어 (의료, 건강관리) 서비스를 확산하여 환자 편의를 높이고 의료비 절감 (416→544억원, +30.8%)

- 아프기 전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, AI·IoT 기반 어르신 돌봄·건강관리 지속 확대

* 모바일헬스케어사업(57→65억원), AI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(94→136억원) 등

- 원격협진 인증제 시범사업('22년~)을 추진하고, 의료인-환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* 모색

* 의·정합의('20.9.4), 한시적 비대면 진료 사업 및 관련 시범사업 결과 등 고려

② (병원 디지털 전환)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(124→235억원, + 89.6%)

-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(매년 3개 분야*, 30→35억원)을 정착시키고, 중소병원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(EMR) 도입 지원 검토

* '20년(감염병 대응): 원격 중환자실, 스마트 감염관리, 병원내 자원관리
'21년(환자 체감형):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, 스마트 특수병동, 지능형 워크플로우

③ (데이터 기반 맞춤의료) 정밀의료 및 4P 의료* 중심 개인 맞춤형 혁신 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생성·수집·공유·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(334→454억원, + 36.0%)

* 4P 의료: 예방(Prevention), 예측(Prediction), 맞춤(Personalized), 참여(Participatory)

- 병원, 공공기관 등 개인 건강정보 기반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*을 구축하고,

* ('21년) 공공기관 활용(55억원) → ('22년) 의료기관까지 확대(141억원)

- 맞춤형 의료 지원을 위해 100만 명 규모의 임상·유전체정보 기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검토(총사업비 9,788억원,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, ~'22.2)

④ (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) D.N.A(Data, Network, AI) 기반 기술을 헬스케어에 활용하기 위한 R&D 투자 확대(563→828억원, + 47.0%)

- 보건산업 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반 마련

* 디지털병리 기반 암전문 AI 분석 솔루션 개발(93억원),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(98억원),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(159억원) 등

- 의료기기, 제약 등 기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D.N.A 기반 기술 도입 지원

* 국산 디지털 의료기기 사용 특화지역 선정 및 실증 사업('22년 20억원) 등

-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취약계층(노인, 장애인 등)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병인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스마트돌봄 기반 마련

* 치매극복연구개발(112억원),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(30억원), 노인·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(100억원) 등

【 ④ 취약계층 조기취업 지원방안 】

◇ 비대면·디지털 관련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지표가 개선 중이나
대면서비스업 등 일부업종 위주로 어려움*이 지속

* '21년 취업자수 증감(전년비, 만명): (숙박음식) △4.7, (도소매) △15, (고용有 자영업) △6.5

◇ 취약계층이 장기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①취업역량 강화, ②조기취업
유인 제고 ③맞춤형 취업지원 등 3대 분야 투자 확대(8조원→10조원, +24.3%)

① (취업역량강화) 직무교육·일경험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, K-Digital Training 확대(1.7→2.9만명) 등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

- 코로나 학번 졸업생('21년 졸업자 및 '22년 졸업예정자) 내일배움카드
자부담률 한시 인하를 '22년 말까지 연장(15~55%→0~40%)하고, 국민
취업지원제도 인턴형 프로그램의 기업 참여 한도도 상향*

* (현행)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최대 20% → (개선) 최대 40%까지 채용

-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을 6개 분야 30개 사업에서 20개 분야 140개
사업으로 확장, 지원을 대폭 확대(11.3만명, 1.2조원 → 15.7만명, 1.6조원)하고,
- 고도화된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범부처 사업 간 인력양성트랙 구축 등
사업간 연계 강화*,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신기술 인력 양성 추진**

* (예시) ^{초급}K-Digital Credit(고용부) → ^{중급}K-Digital Training(고용부) → ^{고급}AI대학원(과기부)

** 각 부처 훈련사업 정보는 HRD-Net 플랫폼을 통해 교육훈련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

- 디지털 선도기업, 민간 협회·단체 등이 주도하는 SW 인재양성 모델도
'21년 1.7만명에서 '22년 2.9만명으로 대폭 확대(1,390억원→3,248억원)

② (조기취업유인 제고) 국민취업제도 참여자의 조기취업지원을 위해 50만원의 '조기취업성공수당'을 신설*하고,

*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 수급하고 취창업시 취업성공금 추가지급(최대 150→200만원)

- 청년층의 원활한 고용시장 복귀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요건완화*,
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상향** 등 지원

* (현행)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가입 허용 → (개선) 1년 이내 재가입 허용

** (현행) 연소득 2,000~3,600만원 → (개선) 연소득 2,200 → 3,800만원

-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,
 - 근로자 10인 미만 월 소득 230만원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 보험·국민연금 부담분의 80%를 지원

③ **(맞춤형 취업지원)** 「구직자-청년-중장년」 대상 맞춤형 구직서비스를 강화하고, 실제 채용까지 이루어지도록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

[구직자 취업지원 강화]

- (청년) 대학일자리센터를 확대·개편하여 서비스 대상 및 기능 확대*
 - * (대상) 재학생 위주→졸업후 2년 이내 청년, (기능) 생활심리 등 전문상담기능 확대
 -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 및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직무체험, 일경험, 직무훈련 등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
- (중장년 등)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심층경력진단 및 설계를 지원하는 ‘중장년 새출발 크레딧’ 신설(50억원)*
 - * 만45세~54세 중소기업 재직자 5,000명 대상 1인당 100만원 지원

[고용장려금 지원]

- (취약계층)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취약계층 등을 고용하는 경우 연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확대(1.2만명, 942억원→2.8만명, 1,370억원)
 - (청년)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(14만명, 0.5조원)
 - (중장년 등)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하는 경우 분기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(6천명, 54억원)
- ④ **(집행관리)** 정부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취업자 수 회복뿐만 아니라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‘완전한 회복’을 위해,
- '22년 1월 중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60만명 이상*이 채용되도록 집중관리 분야를 선정하여 상반기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
 - * 노인 및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경감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 조기 집행목표 상향 추진(당초 계획 50만명 이상, '22년 경제정책방향)

붙임
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'22년 재정운용방향	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	책임자	과 장	임영진 (044-215-5720)
		담당자	서기관	김영은 (bestinme@korea.kr)
	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	박철건 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웅 (ssuper84@korea.kr)
	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완수 (044-215-5330)
		담당자	사무관	이해인 (haein85@korea.kr)
	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준철 (044-215-54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선애 (kimsunae1004@korea.kr)
	기획재정부 국고과	책임자	과 장	강대현 (044-215-5110)
		담당자	사무관	서병관 (seobk@korea.kr)
	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노중현 (044-215-5150)
		담당자	사무관	석상훈 (shseok@korea.kr)
'21년 국고채시장 평가 및 향후 전망.대응	기획재정부 국채과	책임자	과 장	김이한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	최시훈 (choisihoon@korea.kr)
코로나19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재정투자방향	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연희 (044-202-2920)
		담당자	사무관	이길원 (gwlee@korea.kr)
	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	책임자	과 장	박재형 (044-215-7530)
		담당자	사무관	전유석 (hungel138@korea.kr)
취약계층 조기취업 지원방안	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편도인 (044-202-7210)
		담당자	서기관	이지은 (je9167@korea.kr)
	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	책임자	과 장	장보영 (044-215-7230)
		담당자	사무관	원선재 (consecra@korea.kr)